

## 1. 이동욱 : 3분 33초

I. 현황 // 00:18

- IT 기술과 건설, 부동산 산업 접목 // 00:26
- 부동산 정보제공 → 비대면 계약·VR 홈투어 // 00:42
- \* 부동산 개발로도 확장 가능

II. 기대 vs 우려

- ① // 1:02 vs ① // 2:04
- ② // 1:15 vs ② // 2:16
- ③ // vs ③ // 2:37

III. 산업은행 대처방안

- 1. // 2:58
- 2. // 3:15
- \* 경쟁 도태 기업을 미리 파악할 필요
- 3. // 3:33
- \* 정책 펀드를 구성하여 자금 지원

-----  
Q1. 기존 사업자와 신생 사업자 간 갈등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타다 이슈)

A1. 신기술로 인한 시장 진입 - 기존 사업자 간 갈등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질 필요. 정부나 유관기관 간 적극적 회의를 통해 애로사항, 현행법상 문제점을 파악해서 갈등 해결을 조율할 필요 있을 것.

Q2. 프롭테크가 부동산 개발로 확장될 수 있다 → 예시는?

A2. 기사로 읽은 부분이라, 개발 사례까지는 미처 공부하지 못했다.

Q3. IT 보안 컴플라이언스 비용 문제, 어떻게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을까?

A3. 신생 기업, 보안 설계를 위해 초기 비용 부담 크다. 모든 기업에게 지원해준은 비효율적. 따라서, 보안 전문 업체와 연결 시켜줄 수 있는 기능을 산업은행에서 도움을 주거나, 보안 전문 기업에 대한 산업은행이 지원 행할 수 있을 것

Q4. IT 대기업 허가제, 문제점은 무엇이며 바람직할까?

A4. IT 대기업 허가제, IT 보안 관련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함. 대기업은 우수한 연령대를 갖추었기에,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진입 장벽을 크게 만들면 독점이 일어나기 쉬움.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져야할 것. 초반, 스타트업 기업들의 진입과 경쟁력이 이루어지면 대기업도 시장에 참여한다면 더 좋은 기술로 개발이 가능할 것

Q5. 현행법과의 충돌이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지?

A5. 법률상으로는 알지 못하나, 부동산 가격 평가 함에 있어 정확한 평가 가격이 요구됨이 감정평가업계의 요점. 빅데이터나 다른 기준으로 가격을 예측하면 현행법과 충돌.

Q6. 감정 평가, 기술과 부동산 산업이 접목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직방 같이 가격, 중개 플랫폼 이외에 산업을 알고 계신 바 있는지?

A6. 부동산 산업을 겪지는 못하여, 관련 사업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  
F1. (민동재)

- 부동산 개발 ex) 밸류맵 / +)
- 어려운 내용인데 되게 잘 구성해주셨다!
- 원론적 내용에서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주셨으면 좋겠다!
- 우려 - 대처방안 間 1:1 대응이 느껴지지 않아 아쉬웠음

F2. (이호현)

- 표가 A:B, A:B 느낌 -> 비슷하게 묶으면 좋을 수도 있겠고... (대응인지 범주인지 헷갈리긴 했다!)
  - 확실한 내용 2개를 쓰는게 전략적으로 옳을수도!
  - 스케일업 지원 -> 신생기업 vs 기존 사업자 VS 우려
  - IT 대기업 허가제
-

## < 프롭테크 활성화를 위한 산업은행 대처방안 >

### I. 현황

IT 기술과 건설·부동산 산업 접목

부동산 정보제공 → 비대면 계약·VR 홈투어

### II. 기대 vs 우려

기대	우려
기존 기업들의 신사업 확장 경쟁	신생기업 vs 기존 사업자 (가격 예측) (감정평가업체)
정부의 적극적 지원 ⇒ 규제 완화	현행법과 신기술
소비자 편의·수요 증가	IT 보안 이슈

### III. 산업은행 대처방안

1. 스캐일업 지원

2. 부동산 산업의 변화 추이 파악

3. 정책 펀드

## 2. 민동재

민동재 (총시간:06:20)

인사 00:20:00

### 1.도입배경

1. 중국/일본 등 선진국, 정부주도의 산업보다는  
소비와 내수 중심 경제로의 발전을 위해 여가시간 확보 위한  
제도적 01:10
2. 육아가족문제 해결가능성  
일자리적체현상의 해결로 청년일자리 문제도 해결 -> 타협 02:05
3. 전통적 유형경제에서 무형경제로의 전환 02:22

### 2. 영향

- + 사회적 비용감소 02:39
- 52시간 근무제 도입시 반도체/간호직업 등 52시간 근무제를 지킬 수 없는 곳의  
생산성 충격 발생  
제도권 밖의 노동자들은 복지에 있어서의 거리감 형성가능 / 자녀 교육 문제도 가능  
04:05

### 3. 준비사항

1. 임금하락 등의 문제를 스타트업 기업 진입을 이용  
스케일업/스타트업 발굴에 힘쓴다. 04:55
2. 다양한 미니보험, 간접투자 상품등으로 소외계층을 도움 05:25
3. 질적요인인 총요소 생산성 증대로 양적 성장의 침체에 대응해야 06:00
4. 자동화 등으로 충격 이전 연착륙을 지원하여 제조업에 대해 06:30

Q1.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부분 다시 설명

A1. 다양한 기관 및 기업들에 있어 승진적체, 인력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고 연령층의 직책을  
명예퇴직, 임금피크제로 대응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사회적 파이를 나눌 수  
있는 토대를 주 4일제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Q2. 임금하락이 되는 경우 기업은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만 고용해서 임금 상승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 임금 하락

A2. 임금은 계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아랫단계의 임금이 변동했을 때 상위 단계로 전이  
될 수 있다. 효율성 임금 이론처럼 말씀해주신 임금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노동시간의 감소로 인해 총 임금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3. 간접투자상품은 무엇이 있는가?

A3. 청년적금/기본소득과 같은 방식들은 지속가능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성숙한 자본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상품(시중 은행에 의한 WM서비스 등)의 도입으로  
직접투자보다 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Q4. 52시간 근무제에도 유예기간이 있는 직종이 있었는데, 주4일제 근무 도입에도 이는 필요한가?

A4. 외생적 충격으로 인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해당 산업의 DT등을 도와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

Q5. 제도권 밖 노동자들에 대한 대치는 무엇이 있는가?

A5. 제도권 밖 노동자들에 대한 대치는 “각 이코노미” 등의 직업에 대해서는 혁신 상품(미니보험 등)을 도입해 금융시장적 접근으로 해결이 필요하다.

Q6. 주4일제가 도입된다면 생산성이 증진되는 효과에 대해 간과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A6. 도입배경에서의 무형경제로의 전환에서 질적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유형경제의 발전은 대기업(제조업, 기간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형경제의 측면의 산업들에 대한 비대칭적 충격이 나타날 것이다.

Q7. 대기업, 중소기업은 정책에 서로 다른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은?

A7. 지적 재산권의 가치가 상승하는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스타트업 기업들은 취약점이 드러납니다. DT, 자동화가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주4일제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스마트 팩토리 자금지원, 설비리스등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Q8. 지원자가 생각하는 일주일 적정 노동시간은??

A8. 배치되는 부서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단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 외부와의 협업이 필요한 부서의 경우에는 단축이 힘들다. 전자의 경우는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줄이기 힘들 수도 있다.

Q9.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현재 부서는 주 4일제 근무 적용이 가능한가?

A9. 현재 일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52시간 근무도 형식적으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 핵심 업무에 속해있다고 생각되고 자부심, 희생정신이 필요한 직무라고 생각되어 현 직무는 적용이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피드백

(호현)

- 청년일자리의 논리가 이해가 안됨 (청년일자리/교육.복지는 빼는 것이 나은 것 같다.)
- 각이코노미 사례를 든점은 Good => PT에 넣어도 좋았을 듯.
- 대기업/중소기업의 차이점을 구분지었으면 더 좋았을 듯.
- 여가시간 확보 -> 소비증진, 주 4일제로 육아시간이 증가는 논리의 허점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것 같다.
- 기계화, 4차 산업혁명등의 표현도 들어가도 좋을 것 같다.

(동욱)

- 시간 배분을 2분씩 하셨는데 뒷부분 핵심을 보다 많이 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 두괄식 답변을 하고 논리를 말하는 것도 좋을 듯. 00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
- 대기업/중소기업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도 좋음.

## < 주 4일 제의 바람직한 설계 >

### I. 도입배경

- ① 소비·내수 중심 경제 번영
- ② 저출산·청년 일자리
- ③ 무형경제로의 전환

### II. 영향

⊕ 보육·일자리 부담 ↓

⊖ 임금 ↓

소 산업 비대칭적 충격

교육 : 복지 양극화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

## Ⅲ. 준비사항

- ① 비즈니스 역동성 ↑
- ② 소외 계층의 <sup>인</sup>하한선 ↑
- ③ 총요소생산성 <sup>QOL</sup> ↑ by GT
- ④ 소 산업 DT, 자동화 등  
연착륙 지원

### 3. 이호현 : 4분 51초

#### 0.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 1. 상품권 // 00:43

\* 사용 기간, 장소 정해져 있으며 정부 의도 반영

##### 2. 유동성 공급 // 00:59

\* 한계개인에게 유동성

#### 1. 보편 지급을 해야하는 이유

##### ① 재난지원금의 목적 - 소득재분배 아닌 경기활성화 // 01:37

- 행정적 비용 - 선별지급시 행정비용 발생 // 2:07

- 차상위 계층 문제 - 선별지급시 재난지원금 수혜 못받는 계층 발생 // 2:47

##### 2. 보편지급에 대한 비판

- 재정적 부담 // 3:05

- 필요성 // 3:23

\* 한계 효용이 다름을 무시

#### 3. 비판에 대한 재반론

##### ① // 3:52

##### ② // 4:33

\* 빈곤층에게 주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 → 직접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계층 지원 (취지에 맞다!)

#### 4. 결론

- // 4:51

---

#### Q1. 선별 지급 행정비용 절약 논의되고 있는데, 알고 있는지?

- 이미 납부 받고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선발한다면 비용이 절감될 것

#### Q2. 어느 정도 행정적 비용은 보완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 선별 지급의 대안은 많이 존재.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겠으나, 선별 지급을 함은 행정비용을 요구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 선별은 실질적 선발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많이 늘릴 여지가 있다.

#### Q3. 식료품 구매에 활용되는 지출이 오히려 저축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 개인마다 소비 성향이 다르기에, 기존 소비하려던 것을 재난 지원금으로 대체함으로써 추가적 소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재난 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목적과 소비 증진으로 목적이 2개. 소상공인 위주의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소비가 온전히 증진되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효과는 누릴 수 있을 것. 소비가 기대한 만큼 증대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득 보조이기에 구축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활성화 효과는 있을 것.

#### Q4. 재정적 부담이 확대되면, 지속 가능한 재정이 위협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 재정 적자가 확대되어 부담이 많이 될 것. 현재 코로나 19라는 전 국가적 위기.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하는 일은, 적기에 문제 해결. 재정적 부담이 큼에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어느 정도 출혈을 감해 서라도 진행해야한다.



Q5. 코로나19 충격이 전 산업에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매출이 크게 떨어진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이 존재. 직접 피해 계층에는 오히려 선별 지원보다 낮을 우려가 있지는 않을까?

- 산업마다 비대칭적으로 발생하기에 보편적 지급을 이루어야한다. 코로나 19의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가장 크다. 이런 경우, 선별 지급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히 살릴 수 없기에 보편적 지급을 통해 전 소득 계층의 소비를 증진해야. 소상공인 외에도 비대칭적 충격을 오롯이 받은 계층이 있을 것.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보편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선별 지급을 보완책으로 활용해야할 것.

Q6. 복지 정책은 한번 정립되면 축소하기 어려우며, 경로 의존성 존재. 이를 고려하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해당 보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 보편적 복지, 무상 복지의 경우도 선별 vs 보편 복지로 첨예하게 갈등. 오늘날 무상 급식에 대해 크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결과적으로 보편적 복지가 우리 나라가 지향해야하는 상태. 국가의 사회 안정망으로서 강화되려면,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옳다.

Q7. 재난지원금, 대면 소비 중심으로 이루어짐. 해당 정책이 방역 정책과 상반되는 모순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 방역 정책과 소비 장려 정책이 어느정도 모순될 수 있는 것은 맞다. 방역 정책과 소비 장려 정책은 물가와 실업률처럼 두 가지 동시에 해결함은 어려울 수 있음. 기획 재정부나 경제 당국에서는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둘 것. 두 가지가 모순된다 하더라도 결국엔 두 가지 모두 추구해야한다.

Q8. 한정적 자원과 한국의 수출 경제 체질을 고려하면, 수요 측면보다는 투자나 R&D 부문에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후자도 중요하나, 보편적 복지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하면 반대할 것. 미래 성장 가능성에만 투자를 할 수 없을 것. 미래의 효용도 중요하고, 미래의 지표도 중요하나 현재 지표들도 고려해야할 것. 미래 지표만 고려하여 R&D에 재원을 집중하다가 당장의 불황을 놓치게 된다면 이도 저도 아닌 정책이 될 것.

F1. (민동재)

- 일관적으로 주장을 근거 있게 / 경제적 논리를 바탕으로 답변주심은 좋았다.
- 전지 구성에 있어서 Line을 맞추셨으면 좋겠다. (★)
- 질문이 길어지면 두괄식으로 말씀해주심 좋겠다.
- 전지 구성이나, 발표 측면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이야기 해주셨으면
  - \* 소상공인 vs 빈곤층 완벽히 대칭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 전개가 risky 할 수도 있다

**\* 빈곤층에게 주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 → 직접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계층 지원 (취지에 맞다!)**

F2. (이동욱)

- 산업은행은 선별 지원에 익숙해서, 반론이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도
- 비판 - 재비판 구성 좋았다
- 선별 지급 시 행정비용 발생 → “행정 비용이 많지 않다”
  - \* 기존 절차 활용하면 되기에

YONSEI UNIVERSITY  
Sinchon Campus :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Wonju Campus : 1, Yonseidae-gil, Wonju-si, Gangwon-do, 26493, Korea  
International Campus : 85, Songdogwahak-ro, Yeosu-gu, Incheon, 21983, Korea

보편지급을 기본으로, 선별지급을 보완책으로. 이포현

① 보편 지급을 해야 하는 이유

1. 재난지원금의 목적 - 소득재분배 아닌 경기활성화
2. 행정적 비용 - 선별지급시 행정비용 발생
3. 차상위 계층 문제 - 선별지급시 재난지원금 수혜 못하는 계층 발생

②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1. 재정적 부담
2. 필요성

1. 상품권

2. 유동성 공급

③ 비판에 대한 재반론

1. 보편적 복지에 대한 체계적 추시
2. 코로나 19에 직접 타격 받은 계층

④ 결론

- 국가적 차원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

복지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자자체의 선별적 지원.